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 지출비용 변화 분석: 2011-2012년 동일기관 이용 가구를 중심으로*

이윤진¹⁾ 이정원²⁾ 김문정³⁾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보육비가 전 소득계층에 대해 20만원이 동일하게 지원되게 됨으로써 2011-2012년 동일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2012년 누리과정 이용 가구의 기관이용 비용 절감액, 절감액에 대한 만족도, 절감액의 주요 사용처 및 사교육 이용의 변화 양상에 대해 지역규모, 소득계층,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누리과정 도입 후 기본 교육·보육비와 기관이용비용 총액이 절감되었으며, 2011년 대비 절감액 수준은 대도시지역, 고소득 계층,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경제 도움 정도는 절대 절감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 계층, 중소도시·읍면 지역,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가구에서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이나 대도시 거주 가구는 교육·보육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교육 이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화되, 지원금액은 소득계층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누리과정, 교육·보육비용, 동일기관 이용 가구, 차등 지원, 보편적 지원

*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2년에 수행한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이윤진·이정원·김문정) 연구보고서의 원자료를 분석, 활용함.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가정양육수당, 무상보육·교육, 무상급식 등이 시행되면서 보편적 복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Gilbert와 Terrell(2007)의 정의에 따르면 선별적 복지란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는 지급 방식으로 이 때 개인의 욕구는 주로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되는 원리”에 기초하여 자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토대로 소득,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자원(benefits)을 지급하는 방식(김연명, 2010, 재인용)이라고 하였다.

2011년에 정부가 발표한 ‘5세 누리과정’정책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유아(만 5세)에게 동일한 금액을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으로 하위 70%까지 차등적 지원을 하고 상위 30% 이상의 중상·고소득층에게는 비용지원이 없는 선별적 복지방식을 채택해 왔었다. 보편적 복지는 영아에게도 적용되었다. 2012년부터 0~2세 영아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시 무상보육을 받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⁵⁾ 등 무상보육·교육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영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일찍이 명문화되었고,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보육·교육 예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 4천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2007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4조 1,313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지방정부 분담률과 각 지자체의 특수보육시책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까지 포함하면 약 9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혜원, 2013).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는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 약 4조 2천억원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재정을 합치면 총 12조 5,400억원 규모로서 GDP 대비 약 1.01%로 OECD에 권장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이혜원, 2013).

이처럼 무상 보육·교육을 위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시 가장 쟁

4)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2012년에 월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2016년 월 3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임(국무총리·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 2011. 5. 2).

5)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만 5세 이하)에게 소득에 무관하게 생후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36개월 이상~취학 전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함(보건복지부, 2013).

점이 되는 예산부족과 자원배분의 시급성 문제가 무상 보육·교육에도 예외는 아니다. 예산에 대한 책임배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방⁶⁾, 전 계층 영유아의 무상 보육·교육보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서비스 투자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등의 문제제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상 보육·교육의 대상자 확대 정책, 즉 보편적 복지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세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국무총리·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 2011. 5. 2)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보육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 ‘5세 누리과정’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수요자(가구) 입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비용경감이 되었는지, 주로 어떤 계층이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았으며 정책에 대한 체감과 만족도,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그리고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 ‘5세 누리과정’ 정책이 도입된 후 실제로 비용지원을 받은 가구의 비용절감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5세 누리과정’이 보육·교육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보편적 지원정책이란 점에 주목하여 2011년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 소득계층, 지역규모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하여 누리과정 도입 전후 기관 이용 비용 지출 변화 및 가계경제의 도움 정도, 절감액이 사용된 용도와 사교육 이용 개수 및 사교육비 변화 등을 분석하여 보편적 복지를 전제로 한 누리과정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2011년과 2012년 동일 기관 이용 가구의 기본보육·교육비와 기관 이용 총액은 얼마나 절감되었는가?

연구문제 2.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2011년과 2012년 동일 기관 이용 가구에 절감된 기관 이용 비용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는가?

6) 올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무상 보육·교육비에 대한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뉴시스, 2013. 6. 27).

- 연구문제 3.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2011년과 2012년 동일 기관 이용 가구의
절감된 금액은 주로 어떠한 용도로 지출되었는가?
- 연구문제 4.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2011년과 2012년 동일 기관 이용 가구의
사교육 이용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논문을 위한 연구 대상은 2012년 현재 만 5세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누리과정 시행 전 해인 2011년과 누리과정 도입 첫 해인 2012년에 모두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2. 분석 자료와 응답가구의 특성

가.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수행 연구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를 위해 실시되었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조사지역으로, 국가행정주민등록 DB에 등록된 만 5세 유아의 거주 정보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2012년 조사시점 기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5세 유아가 있는 가구 1,605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이다. 조사대상이 된 전체 1,605사례는 만 5세아의 기관 이용 행태에 따라 1) 2012년에 출생후 처음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 2) 2011년부터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례, 3) 2011년에도 기관을 다닌 적은 있으나 2012년에 이용 기관을 변경한 사례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번 사례에 해당하는 1,079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누리과정 시행 전 해인 2011년과 누리과정 도입 첫 해인 2012년에 모두 동일한 기관을 이용한 사례에 초점을 두으로써 2011-2012 동일기관 이용 가구가 정부지원액을 제외하고 부담하는 기관이용비용 지출액의 변화, 이로 인해 느끼는 ‘가구경제에의 도움 정도’, ‘절약된 금액의 사용처’, ‘사교육 개수와 비용 변화’

를 살펴봄으로써 보편적인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성과와 개선 방안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나.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1년과 2012년 동일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가구 1,079 사례의 가구 및 부모특성, 아동특성은 다음과 같다. 특히, '5세 누리과정' 도입 이전에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교육·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1년도의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응답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1〉 응답가구 특성

구분	전체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지원	미지원
계	1,061(100.0)	633(100.0)	428(100.0)
거주지역			
대도시	417(39.3)	193(30.5)	224(52.3)
중소도시	415(39.1)	277(43.8)	138(32.2)
읍면	229(21.6)	163(25.8)	66(15.4)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72(6.8)	55(8.7)	17(4.0)
200~300만원미만	347(32.7)	263(41.6)	84(19.6)
300~500만원미만	540(50.9)	276(43.7)	264(61.7)
500만원 이상	101(9.5)	38(6.0)	63(14.7)
아버지 연령 평균(표준편차)	38.07세(5.78)	38.18세(6.56)	37.91세(4.39)
어머니 연령 평균(표준편차)	35.80세(3.93)	35.89세(4.29)	35.67세(3.32)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278(26.2)	204(32.2)	74(17.3)
전문대졸	246(23.2)	154(24.3)	92(21.5)
4년제 대졸	488(46.0)	242(38.2)	246(57.6)
대학원 이상	34(3.2)	21(3.3)	13(3.0)
해당 없음	15(1.4)	13(2.1)	2(0.5)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382(36.0)	260(41.1)	122(28.5)
전문대졸	324(30.5)	191(30.2)	133(31.1)
4년제 대졸	337(31.8)	171(27.0)	166(38.8)
대학원 이상	15(1.4)	8(1.3)	7(1.6)
해당 없음	3(0.3)	3(0.5)	-

<표 1>은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대상 여부에 따른 응답가구의 거주지역, 소득수준, 부모의 연령과 학력 등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11-2012 동일기관 이용가구 1,061사례 중⁷⁾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가구는 59.7%, 미지원 가구는 40.3%를 차지하였는데,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가구는 중소도시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43.8%), 미지원 가구는 52.3%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등 2011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거주 지역의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2011년 지원 가구에 비해 미지원 가구가 높은 소득구간에 속해 있음이 드러난다. 2011년 지원 가구는 3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이 50.3%에 달하나 미지원 가구는 3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이 23.6%로 지원 대상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300만원 이상은 76.4%에 이르러 차이를 보인다. 이는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이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지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가 평균 38.07세, 어머니는 평균 35.80세이며, 2011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졸 학력인 경우가 전체 46.0%로 가장 많고, 어머니는 고졸이하가 36.0%로 가장 많았는데, 2011년 미지원 가구의 부모 학력이 2011년 지원 대상 가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부모 학력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응답가구 누리과정 이용 아동의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지원	미지원
계	1,061(100.0)	633(100.0)	428(100.0)
이용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153(14.4)	95(15.0)	58(13.6)
민간 어린이집	310(29.2)	191(30.1)	119(27.8)
국공립 유치원	200(18.8)	110(17.4)	90(21.0)
사립 유치원	399(37.6)	238(37.5)	161(37.6)
출생순위			
첫째	597(56.3)	343(54.2)	254(59.3)
둘째	408(38.5)	252(39.8)	156(36.4)
셋째 이상	56(5.3)	38(6.0)	18(4.2)

7) 2011년-2012년 동일기관 이용가구는 전체 1,079사례이나 이 중 18사례가 '2011년 교육·보육비 대상 여부'에 무응답, 혹은 비해당으로 결측처리됨.

응답가구에서 누리과정 이용중인 아동의 특성은 연령이 2012년 현재 모두 만 5세로 동일하므로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출생순위와 현재 이용기관만을 살펴보았다.

<표 2>에 따르면 2012년 누리과정 이용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2011년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첫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들 아동의 이용 기관 또한 지원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37.6%에 해당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이용 비용’의 총액을 구성하는 지출 항목 중 순수한 ‘유아교육비’ 혹은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감액이다.

기관 이용시에는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교재비’ 등 기타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타 항목의 지출은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에서 절감이 된다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를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이라는 변수를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의 항목 중 2011년과 2012년 응답자가 지불한 ‘월평균 기본 보육료/수업료’는 ‘원’ 단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지불하였던 ‘기본 보육료/수업료’의 월평균 금액에서 2012년 현재 지불하고 있는 ‘기본 보육료/수업료’ 월평균 금액을 차감한 변수를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구성하였다.

나. 기관이용 총액 절감액

‘기관이용 총액 절감액’은 ‘기본교육·보육료’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출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2011년 대비 2012년에 절감된 액수로 정의된다. 설문조사 항목 중에 2011년과 2012년의 기관 이용시 지불한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8), ‘행사비’, ‘차량운행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용’, ‘종일반(방과후

과정 이용) 비용' 을 모두 합한 총액을 '기관이용 총액'으로 보고, 2011년 대비 2012년에 절감된 금액을 '기관이용 총액 절감액'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조사항목 상 2011년과 2012년 동일기관을 이용하는 사례의 2011년의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제외한 각종 기관이용 지불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⁹⁾과 '2011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용 총액'¹⁰⁾을 합산하여 '2011년 기관이용 총액'을 산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년 기관이용 총액'을 산출한 후, '2011년 기관이용 총액'에서 '2012년 기관이용 총액'을 차감하는 변수로 생성되었다¹¹⁾.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기관이용시 지출되는 '이용 비용'에서 누리과정 시행 후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의 가계경제 도움 정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지에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모든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으로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직접적인 질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의 가계경제 도움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원받게 된 20만원이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원질문지에서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를 위해서는 3점 척도로 된 변수로 생성하여 사용하였다¹²⁾.

8)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를 말함.

9) 질문지상 문 32-8에 해당하는 변수임.

10) 질문지상 문 34-1-11에 해당하는 변수임.

11)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서 해당 질문은 2011년과 2012년에 지불하고 있는 지불항목별 비용을 월평균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지불항목에는 기본보육료/수업료, 현장학습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방과후과정비용), 차량운행비, 행사비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총계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특성화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는 이와 분리된 질문항목으로 특성화프로그램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과 총계를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12) 해당 자료는 질문지상의 문 51에 해당하는 「5세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지원은 귀하의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에 대한 응답 자료임. 복수응답 문항이 아니며 보기는 ① 매우 도움 됨, ② 조금 도움 됨, ③ 별로 도움 안됨 ④ 전혀 도움 안됨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혀 도움안됨'의 응답비율은 0.9%에 불과해 '별로 도움 안됨'과 '전혀 도움 안됨'을 합쳐 '도움 안 됨', '조금 도움됨', '매우 도움됨' 3개 범주로 된 변수로 생성하여 사용함.

라.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처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처는 누리과정으로 지원받아 절감된 20만원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정의된다. 질문지에서는 보기 문항으로 ‘가족생활비’,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비용’, ‘다른 자녀 사교육비’, ‘저축’, ‘기타’를 두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¹³⁾.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에서 1.4%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한 ‘기타’를 ‘저축’과 합쳐 응답 범주를 줄인 생성변수를 활용하였다.

마. 사교육 개수 증가분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 데이터에는 2011년과 2012년에 사용한 사교육 종류(수)가 각각의 변수로 포함되어 있다¹⁴⁾. 선행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기관이용 비용 절감액이 해당 아동이나 다른 자녀의 사교육비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윤진·이정원·김문정, 2012: 133) 누리과정 시행 후 사교육 개수나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사용한 사교육 종류에서 2011년 사용한 사교육 종류를 차감한 ‘사교육 개수 증가분’의 변수를 생성하여 누리과정 시행 전후의 이용하는 사교육 개수 변화(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바. 사교육 비용 증가분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개수 증가분’ 변수 생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2년 사교육 이용 비용¹⁵⁾에서 2011년에 사용한 사교육 이용 비용¹⁶⁾을 차감한 ‘사교육 비용 증가분’의 변수를 생성하여 누리과정 시행 전후 이용하는 사교육 비용 변화(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의 사교육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이용하는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기타 예체능 학원, 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등의 개별적인 사교육 활용에 소요된 비용만을 의미하며, ‘원’단위로 측정되었다.

13) 해당 자료는 질문지상 문 52에 해당하는 ‘귀하께서는 「5세 누리과정」으로 월20만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절약된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자료임(중복응답 아님).

14) 질문지상 문 53-1(2011), 53-1(2012)에 해당함.

15) 질문지상 문 53-2(2012)

16) 질문지상 문 53-2(2011)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응답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 패키지 SPSS 20.0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규모, 가구소득수준,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2011년 대비 2012년의 교육·보육비 지출 절감액의 차이와 사교육개수 증가분, 사교육비용 증가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F -검증)을 실시하여 집단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어떠한 집단간 차이가 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é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제 특성별로 누리과정 시행을 통한 월 20만원 교육·보육비 지원으로 가구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와 절감금액의 사용처가 어떠한지는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누리과정 시행 후 2011-2012 동일기관 이용가구의 교육·보육 비용 지출 변화

앞서 살펴본 응답가구의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낸 주요 변인(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소득계층, 지역규모)을 중심으로 하여, 2012년 누리과정 시행으로 보편적인 교육·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2011년-2012년 동일기관 이용 가구의 기관 이용 관련 지출액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2011년과 2012년 각각의 기본교육·보육비 지출액, 기관이용비용 총액을 활용하여 생성된 변수로 ‘절감액’ 수준만을 알 수 있으므로, 응답자가 2011년과 2012년 실제 지불하였다고 응답한 금액을 <표 3>에 간략히 먼저 제시하도록 한다.

<표 3>에 따르면, 2011-2012년 동일기관을 이용 중인 응답자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에 월평균 지불한 기본보육료·교육비는 월평균 117,279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평균 3,9031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을 포함한 기관이용 총액은 2011년 월평균 224,250원을 지출한데 반하여 2012년에는 151,241원을 지출하여 누리과정 시행 후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1-2012 동일기관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원, 명

기본보육료·교육비				기관이용 총액			
2011		2012		2011		201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17,279.50	12,048.96	39,031.91	58,369.99	224,250.69	164,038.06	151,241.14	112,590.99

즉, 2012년 누리과정 지원의 혜택을 받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 가구에서는 2011년에 비해 전반적인 비용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좀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의 기본적 보육료/수업료(기본 교육·보육비)와 ‘기관 이용비용 총액’이 얼마나 절감되었으며, 절감액 수준은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가구 소득 수준,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4〉 「5세 누리과정」 전·후 월 기관 교육·보육비용 절감액

단위: 원, 명

구분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			기관이용비용 총액 절감액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9	78194.96	93230.25	1,079	73,009.55	105,682.88
2011년 지원대상 여부						
지원	633	45,889.76	78,592.6	427	40,032.61	93,407.40
미지원	427	121,458.66	93,362.1	633	117,186.86	104,748.60
<i>F</i>		202.08***			157.67***	
소득계층						
200만원 미만	72	30,906.76 ^a	64,307.04	72	26,700.10 ^a	63,437.93
200~300만원미만	350	55,996.25 ^a	86,784.61	350	50,227.76 ^a	94,566.49
300~500만원미만	555	91,301.17 ^b	94,568.69	555	86,428.62 ^b	110,915.23
500만원 이상	103	115,860.05 ^b	95,280.29	103	110,440.64 ^b	11,0596.02
<i>F</i>		23.35***			18.10***	
지역규모						
대도시	426	115,738.28 ^a	92329.84	426	102,066.88 ^a	106086.46
중소도시	419	58,267.11 ^b	88138.35	420	57,923.31 ^b	103226.58
읍면	234	45,487.10 ^b	79754.79	234	96,971.28 ^b	96971.28
<i>F</i>		65.45***			28.78**	

주: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5세 누리과정 시행 후’비용은 월 20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하고 있는 금액임.

a, b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p < .001$

2011년 대비 2012년의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과 기관이용 총액의 절감액 평균에 대한 F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 차이($F=202.08$, $p<.001$),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 차이($F=23.35$, $p<.001$), 지역규모에 따른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 차이($F=65.45$,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기관이용비용총액 절감액 차이($F=157.67$, $p<.001$),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기관이용비용총액 절감액 차이($F=18.10$, $p<.001$), 지역규모에 따른 기관이용비용 총액 절감액 차이($F=28.78$,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 검증을 통해 집단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독립변수의 범주가 세 개 이상이어서 어떠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소득계층’과 ‘지역 규모’별 차이에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기본비용절감액)은 2011년 지원 대상이었던 가구에서 45,889.8원 절감 효과를 본 반면, 2011년 미지원 가구에서는 평균 121,458.7원 절감되어 기존에 교육·보육비 지원을 받지 않던 가구에서의 체감 절감액 수준이 높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200만원 미만 소득가구에서는 30,906.7원의 기본교육·보육비가 절감되었으나 200~300만원 미만 소득가구에서는 55,996원, 300~500만원 소득 가구에서는 91,301원, 500만원 이상 소득가구에서는 115,860원이 절감되어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교육·보육비용 절감액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기본교육·보육비 차이에 대한 Schéffe 사후검증 결과, 2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200~300만원 미만 소득가구에 비해 300~500만원 소득 가구,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 누리과정 시행 후 기본교육·보육비의 절감 폭이 커서, 가구소득수준 300만원을 기준으로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대도시 지역의 기본교육·보육비용 절감액 수준이 11만 5738.3원에 달하며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이 평균 58,267원인 중소도시나 평균 45,487원이 절감된 읍면지역 보다 현격히 커서 주로 대도시 지역 거주자에게 누리과정의 보편적 지원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짐작되었다.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대도시 지역 거주 가구의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절감액보다 크며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총액 절감액 수준을 비교해 보면,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과 동일한 경향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2012 동일기관 사례 전체(1,079사례)에서는 기관 이용비용 총액에서 평균 73,009.6원이 절감되었으나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가구에서는 평균 40,032.6원이, 2011년 미지원 가구에서는 평균 117,186.9원이 절감되어 누리과정 도입 전의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에서 기관이용비용 총액의 절감액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총액 절감액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동일하게 보이며 사후검증결과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 차이와 동일하게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 기관이용비용 총액 절감 폭이 크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기관이용비용 총액 절감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F=28.78, p<.001$),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 기관이용 총액 절감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대도시 거주 가구의 총액 절감액이 중소도시 거주 가구나 읍면지역 거주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가구는 기존의 차등지원체계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미 2011년 미지원 가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해 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추가적) 절감 효과가 희석되어 다소 작게 보여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에 어떠한 교육·보육비 지원도 받지 못했던 미지원 가구의 경우는 소득계층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지원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지출액 대비 절감액의 수준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기본교육·보육비 절감액의 차이가 나타남은 타당한 결과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소득수준과도 일정부분 연계하여 해석될 수 있다. 2011년까지 시행되었던 차등적인 교육·보육비의 지원은 대체로 가구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2011년 당시에 교육·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득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재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2011년에 교육·보육비 미지원 가구일 가능성 또한 높아 2011년 대비 기관 이용 총액 및 기본료 등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절감액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응답가구의 특성에서 대도시 지역에 2011년 교육·보육비 미지원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52.3%) 대도시 거주자에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기본 교육·보육비, 총액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표 1 참조).

이처럼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이 보편적 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기본교육·보육비, 기관이용 비용 총액에서 기존에 지원에서 배제되던 계층, 즉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제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2.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한 가계 도움 정도

앞서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가구들에게서 상당 금액의 기관 이용비용이 절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의 소득계층이나 거주지역 등 제 특성에 따라 기관이용 비용의 절감액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어, 이러한 절대적 비용 절감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이에 <표 5>에서는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소득계층,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 이러한 가계 도움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¹⁷⁾. 전체적으로는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58사례로 전체의 5.4%에 불과하고 대부분 가계경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5세 누리과정」지원금의 가계경제 도움 정도¹⁸⁾

단위: %(명)

구분	도움안됨	조금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chi^2(df)$
전체	58(5.4)	446(41.3)	575(53.3)	1,079(100.0)	
2011년 지원대상 여부					
지원	44(7.0)	244(38.5)	345(54.5)	633(100.0)	8.474(2)*
미지원	14(3.3)	189(44.2)	225(52.6)	428(100.0)	
소득계층					
300만원 미만	30(7.1)	172(40.6)	220(52.3)	422(100.0)	7.391(4)
300~500만원	20(3.6)	235(42.3)	300(54.1)	555(100.0)	
500만원 이상	8(7.8)	39(37.9)	55(54.4)	102(100.0)	
지역규모					
대도시	29(6.8)	206(48.5)	190(44.7)	425(100.0)	22.486(4)***
중소도시	16(3.8)	153(36.4)	251(59.8)	420(100.0)	
읍면	13(5.6)	86(36.8)	135(57.7)	234(100.0)	

주: '도움 안됨'은 '전혀 도움 안됨'과 '별로 도움 안됨' 응답을 합한 수치임.

* $p < .05$, *** $p < .001$

17) 소득계층 200만원 미만의 사례수가 72사례에 불과하여 교차분석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할 수 있어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과 200~3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을 300만원 미만 소득계층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함.

18) 해당 질문의 자세한 내용은 '변수의 정의와 측정'에서 제시함.

교차분석 결과, 이러한 가계경제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2011년 지원 대상 여부와 지역규모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2011년에 지원 대상 가구에서 ‘매우 도움 됨’에 54.5%가 응답해 미지원 가구의 응답 비율(52.6%)보다 높았고, ‘조금 도움 됨’의 응답비율은 미지원 가구가(44.2%) 2011년 지원 대상 가구(38.5%)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가계경제 도움 정도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소도시 거주자 중 59.8%, 읍면지역 거주자중 57.7%가 ‘매우 도움됨’으로 응답한 반면, 대도시 지역 거주자는 44.7%만이 이에 응답하고 ‘도움 안됨’의 응답도 6.8%로 높았다. 앞서 살펴본 <표 4>에서 대도시 지역은 누리과정의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2011년 대비 2012년에 절감된 기관 이용 비용의 절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만족 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이는 지역별 물가수준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대도시 지역의 절감 효과가 일부 희석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런데, 앞서 기본보육료/수업료 절감액, 기관 이용 비용 총액 절감액은 모두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2011년 대비 높은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경제 도움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소득계층별 지원금의 가계경제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보편적 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비의 감소와 가계경제에의 도움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전 소득 계층에 걸쳐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표 5 참조).

다음으로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소득계층,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 결과,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소득계층, 그리고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절감 금액 사용처는 $p<.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참조).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누리과정으로 인해 절감된 금액의 사용처는 ‘가족생활비’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633사례 중 50.6%가 이에 해당하였고, 2011년 교육·보육비 미지원 가구의 경우 절감액 사용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해당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며 198사례(46.3%)가 이에 해당하였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지역은 가장 많이 지출한 용도가 ‘해당자녀의 사교육비’이며

(46.6%), 다음으로 가족생활비 지출이 34.9%였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가족생활비에 각각 48.0%, 45.1%가 지출하였고, 해당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그 다음순위를 차지하여 중소도시 34.6%, 읍면지역 30.0%가 해당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생활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사교육비에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2.8%가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한 절감액을 가족생활비로 지출하고, 해당 자녀 사교육비로는 28.0%만 지출하였으나, 300~5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36.8%가 가족생활비로, 해당자녀사교육비로는 42.7%가 사용하였고,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27.5%만 가족생활비로 사용한 반면, 해당자녀 사교육비로는 57.8%나 사용하였다고 응답했다.

〈표 6〉 「5세 누리과정」지원금의 사용처¹⁹⁾

단위: %(명)

구분	가족 생활비	해당 자녀 사교육비	다른자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비용	다른 자녀 사교육비	기타 (저축포함)	계
전체	455(42.2)	414(38.4)	73(6.8)	73(6.8)	64(5.9)	1,079(100.0)
2011년						
지원대상 여부						
지원	320(50.6)	207(32.7)	35(5.5)	34(5.4)	37(5.8)	633(100.0)
미지원	129(30.1)	198(46.3)	37(8.6)	36(8.4)	28(6.5)	428(100.0)
$\chi^2(df)$			44.86(4)***			
소득계층						
300만원 미만	223(52.8)	118(28.0)	26(6.2)	26(6.2)	29(6.9)	422(100.0)
300~500만원미만	204(36.8)	237(42.7)	44(7.9)	45(8.1)	25(4.5)	555(100.0)
500만원 이상	28(27.5)	59(57.8)	3(2.9)	2(2.0)	10(9.8)	102(100.0)
$\chi^2(df)$			59.05(8)***			
지역규모						
대도시	149(34.9)	199(46.6)	24(5.6)	29(6.8)	26(6.1)	427(100.0)
중소도시	201(48.0)	145(34.6)	29(6.9)	28(6.7)	16(3.8)	419(100.0)
읍면	105(45.1)	70(30.0)	20(8.6)	16(6.9)	22(9.4)	233(100.0)
$\chi^2(df)$			32.37(8)***			

*** $p < .001$

19) 해당 질문의 자세한 내용은 ‘변수의 정의와 측정’에서 제시함.

3. 누리과정 도입 전후 동일기관 이용 가구의 사교육 이용 변화

앞서 누리과정 이용 가구에 대한 보편적 교육·보육비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구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절감된 교육·보육비의 절감액을 사용하는 용처는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교육·보육비의 절감액인 만큼 그 아동을 위한 사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38.4%에 이르며 누리과정 시행 전에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 대도시 지역인 경우 사교육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사교육에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5세 누리과정 이용 전후를 통해 가구의 특성별로 사교육의 개수와 지출액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012년도 만 5세 누리과정 지원 전후의 동일기관 이용 가구의 사교육 개수 증가분, 사교육(지출)비용 증가분의 평균을 역시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소득계층,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동일기관을 이용한 사례 전체로는 사교육 개수가 평균 0.44개 증가하고 사교육 비용도 평균 37,64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5세 누리과정」 전·후 사교육 개수 및 비용 변화

단위: 개, 원, 명

구분	사교육 개수 증가분			사교육 비용 증가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9	0.44	0.74	1,079	37,640.18	69,643.77
2011년 지원대상 여부						
지원	633	0.37	0.68	633	29,261.68	68,890.52
미지원	428	0.54	0.81	428	49,936.94	69,688.28
<i>F</i>	13.15 ^{***}			22.76 ^{**}		
소득계층						
200만원 미만	72	0.09 ^a	0.56	72	17,723.39 ^a	43,547.73
200~300만원미만	350	0.35 ^a	0.65	350	24,874.70 ^a	74,815.89
300~500만원미만	555	0.51 ^b	0.75	555	42,639.84 ^b	62,481.31
500만원 이상	103	0.59 ^b	0.94	103	68,008.17 ^c	87,834.42
<i>F</i>	10.63 ^{***}			13.82 ^{**}		
지역규모						
대도시	426	0.51 ^a	0.7	426	43,481.79 ^a	76,118.06
중소도시	420	0.38 ^b	0.7	420	35,958.06 ^a	66,114.54
읍면	234	0.43 ^{ab}	0.8	234	30,012.41 ^a	62,485.29
<i>F</i>	3.19 [*]			3.03 [*]		

주: '사교육'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교육을 의미함.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 무상 이용은 0으로 응답한 결과임.

a, b, c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01$

2012년 누리과정 지원전후의 사교육 개수 증가분과 사교육 비용 증가분 평균에 대한 F 검증 결과,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사교육 개수 증가분 평균 차이($F=13.15, p<.001$),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개수 증가분 차이($F=10.63, p<.001$), 지역규모에 따른 사교육 개수 증가분 차이($F=3.19, p<.05$)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른 사교육 비용 증가액 평균 차이($F=22.76, p<.001$),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비용 증가액 평균 차이($F=13.82, p<.001$), 지역규모에 따른 사교육 비용 증가분 평균 차이($F=3.03, p<.0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2011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가구에서는 사교육 개수가 평균 0.37개, 2011년 미지원 가구에서는 0.54개 증가하여 누리과정 도입 이후 2011년 교육·보육비 미지원 가구에서의 사교육 이용 개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총액도 2011년 지원 대상 가구는 평균 약 29,261원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 교육·보육비 미지원 가구는 평균 약 49,936원 증가하여 미지원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사후검증 결과와 함께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 규모별 사교육 개수 증가분 평균과 사교육비용 증가액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개수 증가분 차이를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는 평균 0.09개, 200~300만원 미만 소득가구에서는 0.35개, 300~500만원 미만에서는 0.51, 500만원 이상 소득가구에서는 평균 0.59개 증가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한 사교육 개수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Schéffe 사후검증한 결과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200~300만원 미만 가구 보다 가구소득 300~500만원 이상 가구,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사교육 개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낮은 가구보다 누리과정 시행 전후를 통해 사교육 개수가 더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용한 사교육 개수 뿐 아니라 지출 비용도 증가세를 보여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의 증가분도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소득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F=13.82, p<.001$).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용 지출 증가분에 대한 Schéffe 사후 검증 결과, 200만원 미만 가구와 300~5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간, 200만원 미만 가구와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간, 200~3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300~500만원 미만 소득가구간, 200~3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간, 300~5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간 각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용 지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만원 미만가구와 200~300만원 가구에 비해, 300~500만원 미만 가구와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액 폭이 컸다. 또한 300~5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서는 500만원 이상 소득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액 폭이 컸다.

사후검증 결과를 비교하면 300~500만원 소득 가구와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 사이에 사교육 개수 증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비용 증가액의 차이는 유의미하여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300~500만원 소득 가구에 비해 사교육 이용 개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고가'의 사교육 이용이 더 증가했음을 짐작케 한다.

지역규모별 사교육 개수 증가 차이($F=3.19, p<.05$), 지역규모별 사교육 비용 지출의 증가액 차이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03, p<.05$). 사교육 증가 개수는 대도시 지역에서 평균 0.51개, 중소도시에서 0.38개, 읍면지역에서 0.43개로 차이를 보였고, 사교육비 지출 증가액은 대도시 평균 43,481원, 중소도시 35,958원, 읍면지역에서 30,012원 증가하여 대도시 지역이 사교육 개수와 사교육 비용 모두 증가 폭이 컸다.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사교육 개수 증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이가 나서 대도시 지역 거주 가구에서 중소도시 지역 거주 가구보다 누리과정 지원 후 사교육 이용 증가 폭이 더 큼을 보여주나, 사교육 비용 지출 증가분은 가구의 거주 지역규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누리과정으로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소득 가구에게 교육·보육비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로 인해 절약된 금액이 해당 자녀의 사교육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side-effect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논의 및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2012년 누리과정의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아에 대해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월 20만원의 동일 비용이 지원되게 됨으로써 2011년 대비 가구에 어느 정도의 기관이용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왔는지, 가계 도움 정도와 만족도, 사교육의 이용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동일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변화 외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은 가능한 배제하고자 하였다²⁰⁾.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누리과정 시행으로 기관 이용 가구의 전반적인 기관 이용 비용이 절감되었으나, 절감액 수준은 기존의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소득계층,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이로 인해 비용 절감에 대한 가구의 체감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본교육·보육비 뿐 아니라 기관 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 ‘기관이용 비용 총액’의 절감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즉, 누리과정 시행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동일 금액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에 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고소득 가구에서 2011년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반면 기존에 이미 교육·보육비 지원대상으로서 일정액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가구에서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절감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기관이용비용 절감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 절감액 수준이 컸던 2011년 미지원 가구, 고소득 가구, 대도시 지역 거주 가구보다 오히려 절감액의 절대수준이 낮은 2011년 지원 대상 가구, 소득계층이 낮은 가구, 중소도시 지역 가구에서 ‘매우 도움 되었다’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절감액의 절대액 수준과 상관없이 실제 소득이 낮은 취약가구일수록 이러한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클 수 있음을 보여주며, 취약계층을 위해 기관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할 비용 지원 확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누리과정 지원으로 기관 이용 금액이 절감됨으로써 고소득계층, 사교육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서는 사교육이 증진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와 300~5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사이에 사교육 개수의 증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교육 비용 증가분은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유의미하게 커서 고소득 가구에서는 개수 증가보다 특히 ‘고가’의 사교육 이용이 더욱 증가될 수 있는 측면이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정책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보육비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원대상의 보

20) 만 4세에서 만 5세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모든 대상이 같은 연령이므로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편성 유지, 지원수준 차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현재처럼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가구로 보편적으로 유지하되, 가구 소득수준이나 취약성에 따라 지원 수준은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 지원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수혜가구의 경제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즉, 물가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원 소득이 높아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경우 실제 지원받는 절대액의 수준이 높더라도 만족도 혹은 경제적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 원 소득이 낮아 가구 소득이나 지출수준에서 지원액의 비율이 높다면 적은 지원액이라도 주관적인 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응답 결과 현재의 누리과정 금액 지원 계획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무상교육 정책 체감도가 낮은 상태에서(장명립, 2013:1)²¹⁾ 지원액 수준을 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무한정 높이는 것도 재정적 부담이 되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도 근거한다.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 졌던 2009년에 이루어진 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가구의 보육료 부담액의 절대액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그러나, 보육료 부담액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소득 10분위 가구에서는 약 5%의 적정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가구는 소득대비 보육비용의 비중은 10%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혜원, 2013: 21). 소득 1분위 가구는 당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전액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보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이혜원, 2013: 21). 이는 기존에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적정수준의 보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던 고소득 가구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원받게 되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감소한 반면, 이미 누리과정 도입 전부터 기본 보육료와 교육비 무상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 가구는 기관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여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지원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교육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Cunha et al, 2005; Carnerito and Heckman, 2005; 김인경, 2012: 3에서 재인용).

21) 2012년에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의견 조사 결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71.7%가 '유아학비 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이 희망하는 누리과정 지원 적정 유아학비 금액은 월 30~40만원 수준이었음(장명립, 2013: 2)

이러한 논의와 함께 가구소득 대비 유아학비의 적정 부담비율로 5% 이내를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장명립, 2013:3), 재정 부담을 최대한 낮추면서 모든 가정의 보육·교육비 부담수준을 가구소득 대비 5%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수준 별 차등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전형인 스웨덴의 경우도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무상보육 시수에 차이를 두며, 첫 자녀 기준으로 보육료 부담비율이 가구 월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권미경·도남희·황성온, 2012: 114; 윤희숙·김인경·권형준, 2013: 3).

중산층 이상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영유아 대상 학원 이용이 감소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보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 존재하나, 현재 지원 금액 수준에서도 고소득층의 사교육 이용이 확대되는 부정적 측면이 어느 정도 발견된다. 따라서, 향후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과정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 금액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가구소득 등 취약성을 고려한 지원 금액의 차등화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은 선별적 복지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인효과와 사회계층 간 위화감 조성(양극화),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 방해(사회적 통합력의 약화) 등 부정적 측면과(김상곤, 2011: 140) 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의 상향조정이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이룰 수밖에 없고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부정적 측면(전영준·김성태·김진영, 2013: 382) 양면을 고려한 절충안이며, 영유아 사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용 지원의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누리과정 시행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실시된 조사의 자료로 누리과정 시행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제한이 있고, 특히 누리과정 시행 전의 비용은 부모의 회상적 질문에 의존해 수합한 결과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자료 사용에 있어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권미경·도남희·황성온(2012).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상곤(2011).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제2호, 136-147

-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정책포럼, 제246호, 1-8.
- 김연명(2010). 한국 복지,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3.
-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사업안내.
- 윤희숙·김인경·권형준(2013).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KDI FOCUS.
-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2).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원(2013).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4, 8-26.
- 장명립(2013). 누리과정 비용 지원, 현실적 방안 마련되어야... 육아정책 Brief, 2013(1). 육아정책연구소.
- 전영준·김성태·김진영(2013).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2013년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자료, 379-413.
- Gilbert, N. & Terrell, P.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남찬섭·유태균(공역). 서울: 나눔의 집.

[신문기사]

뉴시스 2013. 6. 27. 서울시 vs 중앙정부, 무상보육 '갈등' 깊어진다.

[보도자료]

국무총리·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논문 접수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12월 12일 / 게재 승인 12월 19일

·교신처: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메일 dian74@kicce.re.kr

Abstract

An Analysis of Change in Household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Educ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Nuri Curriculum' Subsidies in 2012

Yun-Jin Lee Jeongwon Lee Moonjeong Kim

This study examined the financial effects of the government subsidy for childcare education and care fees by Nuri Curriculum. The financial effects of the expansion were analyzed based on three criteria, district size, income level, and whether the subject families received subsidies in 2011.

The findings show that due to the subsidy, the household expenditure decreased in 2012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families that experienced more decrease were residences of big cities, higher incomes earners, and those who were not subject to the 2011 subsidies. However, high income classes and residences of big cities who had more opportunities in private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use the subsidies for private education.

Thu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subjects to childcare and education subsidies should remain comprehensive for all classes, but the rates be differentiated by income levels or other relevant criteria.

Key words: Nuri Curriculum,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education, differentiated subsidy, comprehensive support